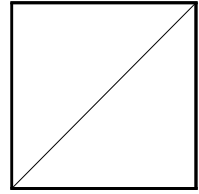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6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19. (제 3 차)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2. 19.

1. 의결주문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과 관련하여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 처리기록의 보존) 제3항, 제52조(과태료)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4항,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0.2.6.) 심의필

<별지>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메이슨캐피탈(주) : 과태료 2,590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메이슨캐피탈(주)는 2016.3.12.~2018.6.14.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 메이슨캐피탈(주)는 2015.2.1.~2016.6.30.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 계 법 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생략)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② (생략)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17.10.19. 시행)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④ 법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1. ~ 15. (생략)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제38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금액
가.~거. (생 략)		
너. 법 제2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2제2호	24백만원
더.~러. (생 략)		
머.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24백만원
버.~후. (생 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한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구 기준]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신 기준 (개정 시행일 2017.10.19.)]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계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나. 감경 사유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1조(기타 조치)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

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이슨캐피탈(주)

2. 제재조치일 : 2020. 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59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1명
직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메이슨캐피탈(주)는 2016.3.12.~2018.6.14.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 메이슨캐피탈(주)는 2015.2.1.~2016.6.30.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3	02-3145-8803